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스웨덴, 덴마크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관련 정책 조사

과제명

- [일반25-005-00]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출장기간

- 2025년 6월 7일~6월 13(금) (4박 7일)

출장국가(도시)

- 스웨덴(스톡홀름, 룬드), 덴마크(코펜하겐)

출장자

- 이주미 부연구위원, 조보배 연구원

일정요약

년월일	행선지 (국가/도시)	방문기관/면담자	활동내용 및 장소
2025년6월7일(토)	- 스웨덴(스톡홀름)	- 국가 간 이동	- 출국 및 도착
2025년6월8일(일)			- (대한민국 인천-네덜란드 암스테르담(경우)-스웨덴 스톡홀름)
2025년6월9일(월)	- 스웨덴(스톡홀름)	- Stockholm University(Martin Hällsten교수, 변영환 박사)	- 1. Martin Hällsten교수 인터뷰 - 시간: 10:00 - 장소: SOFI 연구소 9층 세미나실 - 내용: 사회이동성의 주요 변인에 대한 의견 및 자산이동성에 대한 연구 동향 및 현황 청취 - 2. 변영환 박사 인터뷰 - 시간: 14:00 - 장소: SOFI 연구소 9층 세미나실 - 내용: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 관련 논의
2025년6월10일(화)	- 스웨덴(말뫼) 이동	- 도시간 이동	- 스웨덴 스톡홀름-스웨덴 말뫼(5시간 소요)
2025년6월11일(수)	- 스웨덴(룬드)	- Lund University(Jonas Helgertz 교수)	- Jonas Helgertz 교수 인터뷰 - 시간: 10:00 - 장소: Alfa 1 빌딩 2층(Scheelevägen 15B, 223 64 Lund) - 내용: 스웨덴 사회이동성 현황 및 연구흐름,

			세대간 이동성 연구 관련 청취
		- 국가 간 이동	- 스웨덴 말뫼-덴마크 코펜하겐
2025년6월12일(목)	- 덴마크(코펜하겐)	- University of Copenhagen(Kristian Karlson 교수)	Kristian Karlson 교수 인터뷰 - 시간: 11:00-12:00 - 장소: Building 16, top floor, room 20 (16-2-20) - 내용: 덴마크 사회이동성 현황 및 연구흐름, 세대간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내용 청취
2025년6월13일(금)	- 대한민국(인천-세종)	- 국가 간 이동	- 귀국 및 도착(덴마크 코펜하겐-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한민국 인천)

2 출장 주요내용

①	사회이동성 관련 해외학자 인터뷰 (Martin Hällsten 교수 (Stockholm University))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0:00
장소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SOFI 연구소 9층 세미나실
참석자	Martin Hällsten 교수(스톡홀름 대학교), 김우성 박사(카롤린스카 연구소)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보배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 해당 국가의 최근 사회이동성 실태와 동태(최근 변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스웨덴 경제의 역사적 배경으로 스웨덴은 19세기 후반까지 극심한 빈곤국에서 산업화와 경제적 전환은 스웨덴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 이후 증가한 사회이동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 크게 변동하지 않고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음 ○ 최근 여성 관련 이동성 분석 가능성 증가의 영향으로 여성의 이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간 소득 및 계층 이동성의 수렴(convergence)이 관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여성, 특히 어머니 세대는 노동시장 참여가 낮아 데이터 공백(data artifact)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녀 간 이동성 측정치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모(母)-자(子), 여(女)-남(男) 간 이동성 비교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여성 이동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음 -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 관련 데이터들 또한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음 → 기존 지표상 이동성의 저하가 실제 현상이 아닌, 데이터 보완의 결과일 가능성 높음 <p>□ 2.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개념화 하는지? (사회이동성의 정의가 다양한데,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통용되는 혹은 생각하시는 사회이동성의 개념)</p>	

○ 기계적 정의 → 직관적 정의로 변화: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정교한 정의보다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의로 변화하고 있음

- 연구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

- 어떤 지표(예: 소득 범위 포함 여부 등)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동성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개념 정의 및 측정 방식에 대한 메타연구 필요

○ 직업 이동성 측정

- 직업은 내재적 서열이 없기 때문에, 외부 지표(소득, 교육수준, 사회적 평판 등)를 통해 서열화 필요

- 최근 경향은 직업지위(rank)를 연속형 변수로 전환하여 소득 이동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경향을 보임

- (참고연구) EGP 계급체계 (Erikson-Goldthorpe-Portocarero)

- John H. Goldthorpe, Robert Erikson, Lucienne Portocarero가 공동 개발한 계급 구조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산업국가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성 비교 연구를 위해 설계

- 직업을 임금 노동자 / 자영업자 / 관리자/전문가 등 10개(또는 축소된 5-7개) 계급으로 분류, 각 계급은 직업 특성, 고용 형태, 감독 권한, 자영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나뉘며, 사회이동성 분석에서 자주 사용됨

- 예) 상위 계급(I-II): I(고위 관리자 및 전문직), II(저위 관리자/전문가)

중간 계급(III-V): IIIa(고급 비숙련 사무직), IIIb(하급 사무·서비스직), IVa(종업원 포함한 자영업자), IVb(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IVc(농업 종사 자영업자), V(비숙련 감독 기술직)

노동자 계급(VI-VII): VI(숙련공), VIIa(반숙련 비농업 노동자), VIIb(농업 노동자)

○ 세대간 이동성과 세대내 이동성에 대한 견해

- 세대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이 높으면 개인의 삶에서 소득 변동성 증가, 불안정성 초래할 수 있음

- 인생에서 상승경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하강 경험은 불만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 반면, 세대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은 기회의 평등, 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

○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에 대한 견해

- 사람들은 잃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커서, 진보를 원하는 경향 →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이동성'이 중요

□ 3. 기관(혹은 연구자)가 최근 수행했거나 최근 참고하고 있는 관련 최근 연구들

○ 역사적 이동성 연구 중심

- 100~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기적 계층 이동의 지속성을 분석

○ 젠더 기반 이동성 비교

- 특히 모-자, 부-자 간 이동성 비교를 통해 젠더 차원에서의 이동성 구조 탐색

○ 혼인·결혼시장의 사회이동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

- 최근에는 부모 간 특성 결합(예: 교육 수준, 계층), 동질혼(homogamy), 상향혼(hypergamy), 하향혼(hypogamy) 등 부모 세대의 결합 방식이 자녀세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증가
- 고학력-고학력 결합은 자녀에게 누적적 이점이 존재하나, 반대로 저학력-저학력 결합은 구조적 제약 지속

□ 4.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사례

○ LNU (Swedish Level-of-Living Survey): 가장 최신으로 2020년 자료가 존재하며, 사회이동성 관련 인식 조사 항목 포함

- (개요 및 목적) 1968년에 시작된 스웨덴의 전국 대표 패널조사로, 동일한 개인을 반복 추적(interview)하면서 생활조건의 변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 세대 간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
 - 핵심 목적은 "스웨덴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들과 연결되는가?"를 밝히는 데 있음
 - 다차원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가족 및 사회 관계, 물질적 생활 조건(소득 및 부), 건강, 교육, 근로 조건, 정치 생활, 여가 활동, 주택 조건 등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원 활용도를 다루고 있음
- (조사방법)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행정등록자료(register data)를 통합적으로 활용함
 - 국가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한 표본을 통해 고정된 응답자 집단을 주기적으로 추적
- (조사범위) 건강, 교육, 노동, 소득, 가족 및 사회생활, 주거, 정치참여 등
 - 건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 교육: 학력, 교육 기회의 평등성
 - 노동: 고용상태, 직업 안정성, 작업환경, 스트레스 등
 - 소득: 경제적 자원, 소득 변화, 재정적 안정성
 - 가족 및 사회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통합
 - 주거: 주거환경, 이웃 특성 등
 - 정치 자원: 정치 참여, 영향력, 사회적 자본
- 다만, 자료량이 제한적이어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

□ 5.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주요 정책영역별 과제)

○ 스웨덴 사회의 신뢰·공정성 기반

- 국민들은 정의, 공정한 기회, 공정한 평가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

- 고품질·무상 교육, 기회의 평등, 차별 없는 제도 설계가 이동성 유지에 기여함

○ 최근 직업교육의 변화

- 과거 직업계열 고등학교는 노동시장 진입만을 위한 통로였으나, 현재는 대학 진학도 가능한 진로 다양화 구조로 개편
- 스웨덴은 최근 고속런 경제(high-skill economy)로 전환 중이며, 전통적 육체노동(manual labor)은 이민자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스웨덴 본토 출신 국민 중에서는 직업교육의 수요 감소 경향 있음
 - 따라서 직업교육은 한편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지만, 하위계층 고착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교육은 사회이동성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과거 교육 개혁(의무교육 확대 등)의 이동성 향상 효과에 대해 일부 연구는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있음

□ 6. 자산(혹은 부, wealth) 이동성에 대한 연구의 관련

○ 사회이동성에서 소득, 교육, 직업은 모두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러나 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 부(wealth)는 노동시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소득·직업과는 이질적인 속성을 가지는 등 소득 이동성과 자산이동성은 별개의 체계로 작동하며, 자산의 경우 이동성이 낮고 지속성(persistence)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 정치권은 자산보다는 소득에 집중,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적극적이거나 자산에 대한 과세나 정책 개입은 회피해 왔음

- 2007년 이후 재산세 폐지로 인해 국가 차원의 자산 데이터 축적이 중단되어 연구의 한계가 존재
 - 자산 데이터는 정직한 응답 유도와 가치 평가의 복잡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고 데이터가 부족의 영향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자동차 등록정보, 주택 소유 정보 등 대체 자료를 활용한 자산 추정 시도는 있지만, 방법론적 한계 존재
- 스웨덴의 좌파 정당조차도 자산세 및 자본 규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자본가와 타협, 이는 1930년대 이래의 ‘합의 정치문화(consensus politics)’ 와 연결됨

○ 일반 국민의 인식과 통계 간 괴리 존재: 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산 축적의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동성이 낮다고 체감

- 자산가격의 비탄력성으로 자산 수요 증가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7. 지역 간 불평등 및 이동성

○ 한국에서 자산은 부동산의 영향이 크게 작용, 지역간 자산이동성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 지역단

위 불평등 혹은 이동성 구조를 분석한 경험이 있으실지? 고민해보셨는지? (본 연구에서도 지역이동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역이동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도 함)

-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내 지역 간 사회이동성의 지속성 차이 존재
 - 스웨덴 내에서도 지역별로 사회이동성의 지속성 수준이 다르며, 이는 역사적 귀족 계층의 비율, 상류층 구성비 등과 밀접한 관련, 조부모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적 요인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음
 - 상층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이 높고, 상층계층 내 이동성(하강 또는 진입)이 낮음
→ 지역별 고착화 심화
 - 사회이동성은 상위·하위층에서는 정체(persistence)되고, 중산층에서 가장 역동적인 구조를 보임
 - 귀족계급 비중이 역사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현재도 이동성 낮은 경향 존재

〈참고자료〉

Hällsten, M. (202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ealth. Handbook on.

Hällsten, M., & Thaning, M. (2022). Wealth as one of the “big four” SES dimension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s. *Social Forces*, 100(4), 1533-1560. (1)

Hällsten, M., & Yaish, M. (2022). Intergenerational educational mobility and life course economic trajectories in a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8(4), 507-526.

Hällsten, M., & Thaning, M. (2022). Wealth as one of the “big four” SES dimension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s. *Social Forces*, 100(4), 1533-1560.

Hällsten, M. (2020). Scaling Occupations in Intergenerational Research-An evaluation with Swedish register data. Socarxiv <https://osf.io/preprints/socarxiv/xy9q>.

②	사회이동성 관련 해외학자 인터뷰 (변영환 박사(Stockholm University SOFI))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4:00~16:00
장소	스웨덴 Stockholm University SOFI 연구소 9층 세미나실
참석자	변영환 박사(SOFI), 김우성 박사(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보배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스웨덴의 세대간 이동성 및 빈곤 관련하여 최근 추이

- 세대간 이동성: 스웨덴에서는 이민인구가 많고 이민세대에 대한 사회이동성에 주목. 그러나 이민자 세대간 이동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음. 이민자 자녀세대가 30, 40대 될때 이민자 세대의 사회이동성에 관해 살펴볼 수 있을 것 임.
- 세대내 이동성: 스웨덴은 세대내 이동성이 큰 편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직업 교육으로 갈지 고등교육으로 진학할지에 대해(Two track) 으로 나뉘어 짐. 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기에 나뉘어짐. 다만 이로 인해(비교적 늦은 시기에 직업 Track 을 선택한다는 점)으로 인해 숙련수준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음.

- 유럽에서는 사회계급을 '직업'으로 정의하기도 함. 관련하여 에릭스-콜스로프 관련 연구들이 있음. 직업을 계층화하여 점수화 하는 방법임. 스위스 University of Lausanne 의 Daniel Oesch 홈페이지에서 코딩을 공개하고 있음.(하단의 홈페이지 참고)

- 참고: https://osf.io/preprints/socarxiv/w9akc_v1 SocArXiv Papers | Occupational Earning Potential: A new measure of social hierarchy applied to Europe

- 참고: <https://people.unil.ch/danieloesch/scripts/>

- 세대간 이동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임. 덴마크, 영국, 미국, 호주 등 5개 국가들을 비교한 국가의 세대간 사회이동성을 비교한 연구가 있음. 덴마크는 8%, 미국은 43%나옴. 덴마크와 스웨덴이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웨덴의 세대간 이동성이 높은 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음.

- 이는 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계될 가능성이 큼. 부모세대에서의 고용 충격(예를 들면 실업)이 있는 경우, 스웨덴의 경우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고, 병가휴직,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유럽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1년의 실업보험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실업부조로 넘어가는 시스템임. 다만 실업부조 일때는 지원받는 금액수준이 낮음). 이외도 장애부조, 주거비 지원, 의료(스웨덴의 경우 조세로 운영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두터운 사회보장제도가 부모세대에서의 경제적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여 자녀세대까지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수치 상으로 스웨덴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이민 2세대)와 스웨덴 현지 출생 자녀의 고용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중간에 스웨덴을 이민을 온 이민자 자녀의 경우에는 고용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논문: Per Engzell 교수의 논문 내용: 이민자 학생들의 경우 과잉교육(Over education)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민자 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율은 높으나 성적은 낮은 문제가 있음.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는 문제가 있음.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점이 이민자 차별 문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자 함.

□ 스웨덴의 이중노동시장 문제

- 스웨덴의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로는 성별, 이민, 교육, 전공에 따른 차이가 있음.

-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가 '평생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임금차이를 낳음.

- 반면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의 큰 격차가 있음. 교육정책이 이를 평등화(equalize)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Anders Stenberg 관련 논문 작성

○ 현지인과 이민자 내에서의 이중노동시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 유럽 연합 통계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를 작성하고 발표. 여기에서 스웨덴 내의 비유럽국가 이민자 실업률은 22.3%, 유럽국가 이민자 실업률은 9%, 스웨덴 현지 실업률은 7.4%로 나타남.

□ 스웨덴의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의 문제

○ 스웨덴은 자발적 part time이 높은 경향이 있음. 비자발적 part time도 있음.

○ 스웨덴은 고용계약이 크게 2개로 나뉘어짐. 1)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Open ended contract) 2)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이 있음. 1)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하루, 한달, 일년 이년 정도로 다양함. 스웨덴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기간제 고용으로 채용됨. 현재는 기간제 고용에 있는 기간이 길어져 30대 이후에도 기간제로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는 1995년 이후 EU 노동시장이 통합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웨덴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기간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이 사회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메커니즘

○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70%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노동조합은 사회통합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는데 고임금 직종의 경우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더 높게 할 수 있음. 사회보험이나 교육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노동조합이 축소 될때 전체적으로 취약한 직종이나 산업부터 없어지는 경향이 있음.

□ 스웨덴의 실업보험 제도

○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자발적 가입에 기반함.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으로 자조(Self-help) 노동조합의 직역별로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함.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로는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이 있음. 그러나 실제로 재정의 절반 이상은 국고에서 보조함.

○ 실업보험의 역선택의 문제에 관해. 실제로 스웨덴에서 보수정권때 산업별 실업율에 연동하여 실업보험요율을 높이는 정책을 선택. 이에 오히려 노동의 불안정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보험요율이 높기 때문에)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상이 생김. 2008년과 2009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 시기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김. 2014년 좌파 연합정당으로 교체되면서 이전의 실업보험의 형태, 즉 산업별 실업율에 연동하여 실업보험요율을 높이는 구조에서 전체 산업의 실업보험요율을 동일하게 하도록 변화함. 코로나 시기에는 3개월만 가입하더라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 스웨덴의 사회이동성 현황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제언

○ 직업교육에 있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이라는 것이 '기회의 평등'을 높

이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스웨덴의 경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

- 한국은 직장(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만 가능)에 따라서 실업보험이나 병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실제로 사회보장체계의 보장의 범위가 직장에 따라 차이가 남. 이러한 차이 즉 모두가 사회보장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Coverage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③	사회이동성 관련 해외학자 인터뷰 (Jonas Helgertz 교수 (Lund University))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00
장 소	룬드 대학교
참석자	Jonas Helgertz 교수 (Lund University), 김우성 박사(카롤린스카 연구소)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보배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해당 국가의 최근 사회이동성 실태와 동태(최근 변화내용)

-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높은 사회이동성을 유지해 왔으며, 산업화 이후 절대·상대적 이동성 증가 경향이 관찰됨 (1830-1968년 연구)
 - 이동성 향상은 교육 확대, 복지국가 발달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본인의 연구에서는 근대화(industrialization) 과정과의 연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
- 1) 사회계층, 일자리 사회이동성, 불평등은 올라가고 있지만 직업 또는 사회계층 기반 이동성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큰 변화는 없다고 평가
 - 전반적으로 사회이동성은 둔화되는 경향. 특히 상층과 하층에서의 지속성(persistence)이 강화됨
 - 산업화와 근대화가 초기에는 이동성을 증가시켰지만, 최근에는 정체 또는 되레 감소 추세
 - subQ)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는지?
 - 현재의 노동시장이 완전 능력주의적이지 않고 네트워크, 연고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인 추천, 인맥이 채용에 결정적 역할
 - 이는 익명적·실력 기반 채용(market meritocracy) 원리와 충돌하며, 자격 갖춘 사람 많아질수록, “누구를 아는가”가 핵심이 됨 → 실질적으로는 탈-근대적/반-실력주의 구조로 회귀하고 있음
- 2) 불평등 증가와 맞물려, 부의 이동성이 특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향, 직업을 통한 이동성에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자산 수준에서의 격차와 세습 경향은 더 뚜렷해짐
 - subQ) 자산이동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배경, 분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식에 의한 것일지?
 - 자산 불평등 증가에 대한 경향은 경험적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perception)에 기초한다고 생각
 - 2000년대 초까지는 재산세(wealth tax) 덕분에 자산 데이터가 풍부했으나, 2007년 재산세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등록자료 기반 측정이 어려움
 - 과거 자료에서 자산의 지니계수는 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이는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

는 간접 증거로 활용됨

□ 2.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개념화 하는지? (사회이동성의 정의가 다양한데,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통용되는 혹은 생각하시는 사회이동성의 개념)

- 경제사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의 이론과 지표(특히 직업 기반 계층화 지표) 를 많이 차용, 주로 직업 기반의 상대적 이동성(relative mobility) 을 측정
 - 구조적 변화(산업화, 직업 구조 변화 등)를 통제한 상태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측정
 - 사회이동성은 단순한 소득 변화가 아닌 직업지위(HISCAM), 사회계층(HISCLASS), 생애소득 등의 세대 간 전이 구조로 개념화
 - 이동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조적 재생산(structural reproduction)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함
- 소득은 변동성이 크므로, 다년간 평균 소득을 활용하여 이동성 측정이 필요
 - 1968년부터 등록소득 데이터가 존재하며, 일부는 1900년대 초반까지 소규모 데이터 확보 가능
 - 소득 이동성의 대한 분석은 직관적으로 이해는 쉽지만, 시간에 따른 소득 변화가 커서 분석이 까다로움.
 - 따라서 대규모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 가 필요함

□ 3. 기관(혹은 연구자)가 최근 수행했거나 최근 참고하고 있는 관련 최근 연구들

- 최근 스웨덴 경제사 연구는 장기적 시계열에 기반한 사회이동성 연구에 집중
 - 1880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연결(linkage)하여 사용하면서 장기적 시계열을 통한 이동성 연구들이 신진 연구자들의 경향이 보임
 - 남스웨덴 지역 기반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화 이후 이동성 증가에 대한 경향을 확인
- 최근 연구들
 - 「Do Grandfathers Matter?」(2022): 조부와 손자 간 직업·계층 전이 뚜렷하나, 소득 전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조부-손자 간 생존기간 겹침, 거주 근접 등은 효과 미미
 - 「Multigenerational Mobility in Sweden (1815-2011)」: 계층과 직업지위의 3세대 지속성 강함, 소득은 약함. 사회적 지위의 구조적 고착(structural stickiness) 확인
 - Clark (2014), Mare (2011), Pfeffer & Killewald (2017) 등 다세대 지위 전이 및 잠재적 지속성(latent persistence) 관련 문헌 중심의 연구 축적
- subQ) 이동성 연구에서 일반적인 영역(소득, 교육, 직업, 자산) 외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 건강(health)의 세대 간 전이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생각, 그러나 등록 데이터의 한계로 분석은 어려움이 있음

□ 4.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사례

- 스웨덴 내에서는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연구는 부족
- 다만, 불평등과 자산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은 언론 및 학계에서 증가, 이는 대중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ESS(European Social Survey)와 같은 국제조사에서 관련 문항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자료를 직접 활용한 연구는 보이지 않음

□ 5.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주요 정책영역별 과제)

- 1) 하나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고등 교육기회 확대(초기 교육기회, 무상제공, 시설 확대), 보조금, 값싼 대출로 생활비를 낮춰주는 등 복합적인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이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 2) 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평등정책의 영향
 - 스웨덴은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 아픈 자녀 돌봄 휴가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시행,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 등 구조적 불평등은 존재
- subQ) 자산불평등 혹은 자산이동성에 대해 일반 사람들과 연구자들이 주목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재산세를 부활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슈는 없는지?
 - 스웨덴은 과거 재산세(wealth tax)와 부동산세(property tax)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가장 어리석은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부동산은 회피하기 어려운 자산인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 대중이 반대할 것이라는 정치적 인식이 강하여 정치권은 재도입 논의를 “정치적 자살”로 간주하며 회피하고 있음
- subQ) 영국 등 일부 연구자들은 ‘교육’이 오히려 사회이동성은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스웨덴의 경우 여전히 교육이 사회이동성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는지?
 - 교육은 여전히 불리한 배경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육만으로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 인적 네트워크의 결핍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실용직업교육(예: 전기기사 등)의 상대적 가치 상승이 관찰되고 있음

□ 6. (다세대 사회이동성 연구) 조부모 효과가 주로 계층·직업 지위에서는 강하게 나타나고, 소득(earnings)에서는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세대를 넘어선 다세대 연구에 주목하게 된 동기

- 직업·계층 지위는 구조적 위계성 반영 및 세대 간 누적성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이론적으로는 불평등의 전이(persistence of inequality)가 오랜 시간축을 통해 작동한다고 생각
 - 따라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증조부모까지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연구를 수행
- 그러나 실증적으로는 대부분의 영향은 부모세대에서 발생, 조부모 영향은 미약
 - 연구팀은 같은 지역 거주 여부, 생애 중 중첩 기간 등을 통해 영향을 분석했으나 강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특히 스웨덴처럼 역사적으로 대다수가 농민 등 저소득층이었던 사회에서는 조부모 효과 자체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함
 - 다만, 교육 확대기(educational expansion)를 경험한 조부모 세대 이후부터 조부모 효과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은 있음

〈참고자료〉

Helgertz, J., & Dribe, M. (2022). Do grandfathers matter for occupational and earnings attainment Evidence from Swedish register data.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8(1), 54-72.

Dribe, M., & Helgertz, J. (2016). The lasting impact of grandfathers: class, occupational status, and earnings over three generations in Sweden 1815-2011.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6(4), 969-1000.

□ 7. (지역 기반 네트워크 연구 - 이민자 네트워크 분석의 일반 인구 적용 가능성) 이민자의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county 단위와 neighborhood 단위로 이원화하여 분석. 지역이동성 연구에 대한 견해

- county와 neighborhood 단위 분석을 통해 도시 내 근거리 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 확인
- 도시지역에서의 근거리 네트워크가 긍정적 경제효과를 창출. 해당 분석 틀은 도시-지방 간 기회 불균형, 교육·직업 이동성 격차 분석에의 확장 가능성 확보

○ 스웨덴에서는 지역 간 이동성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 이는 연구의 공백으로, 향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

- 예컨대 영국에서는 도시-비도시 간 비교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결과는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움이 존재

〈참고자료〉

de Arriba Moreno, F., Helgertz, J., & Tegunimataka, A. (2024). Policy-driven migrant selec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immigrants in Sweden and Denmark. In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2024*.

Castillo, M., & Helgertz, J. (2025). The role of migrant networks on economic outcomes during the age of mass migration Swedish immigrants in the US 1900-1920. *The History of the Family*, 1-24.

④	사회이동성 관련 해외학자 인터뷰 (Kristian Karlson 교수 (University of Copenhagen))
일 시	2025년 6월 12일(월) 11:00
장 소	코펜하겐 대학교
참석자	Kristian Karlson 교수 (University of Copenhagen)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보배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덴마크 사회이동성 현황. 최근 추이 관련

○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1) 횡단면적인 추이: 덴마크의 세대간 사회이동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 이는 덴마크의 재분배 정책 때문

○ 덴마크는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높은 나라임 (low elasticity). 그러나 이는 노동소득(labor income)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회이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세(tax)나 사회이전 소득(transfer)을 기준으로 할때에는 재분배(redistribution)이 높아져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임스 헤커만이 Scandian Fantasy라고 이야기함(하단의 논문 참고)

- Landersø, R. and Heckman, J.J., 2017. The Scandinavian fantasy: The sources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Denmark and the US.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9(1), pp.178-230.

- Mogstad, M., Salvanes, K.G. and Torsvik, G., 2025. Income Equality in The Nordic Countries: Myths, Facts, and Lessons (No. w3344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제임스 헤커만이 지적한 부분: 노동시장 소득-노동시장 소득은 pure measure of human capital이라고 할 수 있음-이걸로 측정할 때는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으로 측정할 때는 사회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덴마크의 복지제도가 높은 세대간 사회이동성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함.

○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재분배 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부분임. 그러나 돈(money)을 재분배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음.

○ 덴마크: Equal opportunity 가 아닌 'Regulating the consequence'를 잘하는 국가임.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동일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실제로 가처분 소득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차이가 없도록 함.

2) 시계열 적인 추이: 덴마크의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임.

○ 덴마크의 사회이동성의 추이와 관련하여, 사회학의 아티클이 있고, 경제학에서 다른 워킹페이퍼가 있음. 여기에서의 주된 논의는 시계열 적인 변화를 볼 때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낮아지는 변화-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보다 덴마크의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높기는 함-를 보인다는 점임.

- Harding, D.J. and Munk, M.D., 2020. The decline of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Denmark: Returns to education, demographic change, and labor market experience. *Social Forces*, 98(4), pp.1436-1464.

○ 스웨덴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남성과 여성의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유사해지는 형태를 보임.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집단들이 대거 포함되기 때문. 덴마크의 사회이동성이 낮아지는 것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음.

- Ahrsjö, U., Karadakic, R., & Rasmussen, J. K. (2023). Intergenerational mobility trends and the changing role of female labor. *arXiv preprint arXiv:2302.14440*

3) 교육이동성 관련: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교육이동성 자체는 높지 않음.

○ 덴마크에서는 1950년에서 1960년 기간동안 세대간 교육개혁이 이루어짐. 이 시기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서 세대간 이동성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음. 이 시기의 (교육정책의 변화를 받은)세대에서의 '교육'은 사회이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Predictor)인 것으로 확인됨.

○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교육 정책의 변화는 세대간 이동성을 약화하는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 덴마크의 교육이동성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교육이동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유럽국가들 내에서의 교육이동성의 편차(Variation)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소득 이동성은 덴마크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Andrade, S. B., & Thomsen, J. P. (2018). Intergenerational educational mobility in Denmark and the United States. *Sociological Science*, 5, 93-113

□ 사회이동에 있어서 초기 성인기까지는 '교육'이 사회이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더라도 성인기에서의 '교육'의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시기에는 어떠한 정책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

○ 덴마크는 교육(Education)과 노동시장(Labor Market)의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즉 성인기에도 교육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등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Bol, T., Ciocca Eller, C., Van De Werfhorst, H.G. and DiPrete, T.A., 2019. School-to-work linkages, educational mismatches, and labor marke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2), pp.275-307.

□ 사회이동성 연구에서 사회이동성을 다양하게 정의함. 어떠한 정의가 중요한지?

○ 사회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대간 이동성에 있어서 상대적 이동성에 초점을 두어왔음.

□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대응이 있는지?

○ 영국에는 사회이동성위원회(Social Mobility Commission)가 있으나 덴마크에는 이러한 위원회가

없음. 다만 덴마크의 경우에는 자파와 우파 모두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사회이동성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함. 덴마크에서도 중산층의 경우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 정부에서는 특정집단이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 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 덴마크에서는 학교 교육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대학생의 경우에도 급여(Stipend)를 지급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급여 지급이 실제로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음. 그러나 일반적인 대중들은 -급여(Stipend)를 지급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덴마크는 노동시장에서의 활성화(Labor market activation) 정책을 매우 강력하는 하는 국가임. 주로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직업센터(Job center)로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매우 잘 갖추어 져 있음.

○ 덴마크에서도 니트(NEET)가 15~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집단은 정책적으로 Mobile(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한다거나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하도록 하기를 희망하는 집단이지만, 이들 집단은 실제로 잘 변화하지 않는 집단이기는 함.

□ (교수님이 기존에 진행한) 사회이동성연구에서 변동성(Volatility)을 본 점이 인상적임. 이를 소득과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 이 연구에서 5년 단위로 연구를 하였는데, 이 기간동안의 평균값(mean)을 중심으로 (각 해의) 변동성을 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함. 관련하여 자산 연구로는 연구 참고. (Rank based measure on wealth) 이들의 연구에서 순위(Rank)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자산의 변동성이 집단에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 (하단의 연구 참고)

- Pfeffer, F.T. and Waitkus, N., 2021. The wealth inequality of n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6(4), pp.567-602.

○ 미국의 Chetty의 연구가 집단 간의 차이(백인과 흑인)를 봄으로써 집단간의 상대적 차이를 살펴본 연구임. 그러나 이를 (하나의 국가)로 볼때에는 집단간 차이를 보는게 되지는 않을 것임.

□ 덴마크에 자산 관련 자료가 있는지?

○ 덴마크에서 90년대 자산세를 거두는 것에 대해 멈춤. 자산 분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경제학자 연구가 있음. (하단의 연구 참고)

- Boserup, S.H., Kopczuk, W. and Kreiner, C.T., 2016. The role of bequests in shaping wealth inequality: evidence from Danish wealth records. American Economic Review, 106(5), pp.656-661.

□ 덴마크의 사회이동성 성별격차가 낮음. 주요한 정책적 요인은 무엇인지?

○ 덴마크의 노동조합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함.

○ 성별에 따라 다른 산업에 들어가는 Sorting mechanism이 있음.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성별을 구분하

령 볼대 초등학교 교사에서 여성 비중보다 유치원 교사에서의 여성 비중이 높음.) 더불어 가정에서도 볼 때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금 상승이 낮으나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실제로 소득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음. 덴마크의 motherhood penalty (하단의 연구 참고)

○ 에스핑 앤더슨의 끝나지 않는 혁명에서 논의한 것. 덴마크의 모든 가정에서의 소득 비중 남성과 여성이 60:40으로 나타남. (모든 덴마크 가족이 이러한 형태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 않지만, 여전히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leven, H., Landais, C. and Sogaard, J.E., 2019.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4), pp.181-209.

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 면담자 명함 등

①

해외학자 인터뷰 (스톡홀름 대학교, Martin Hallsten 교수)



②

해외학자 인터뷰 (스톡홀름 SOFI연구소, 변영환 박사)



③

해외학자 인터뷰 (코펜하겐 대학교, Kristian Karlson 교수)



